

“농업이 또 희생돼선 안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한미통상협상 대응 촉구 공동성명
“타 산업의 이익 위해 교환될 수 없는 생존산업… 식량주권 먼저 지켜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한미통상협상에서 농업을 또 다시 협상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성명에는 어기구·이원택·문금주·문대립·서삼석·송육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30여 년간 우리 농업은 국제 통상협상에서 늘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며 “농촌과 농민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고 강조했다.

특히 WTO 출범 이후,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 등 주요 무역협정에서 농업은 협상에서 가장 먼저 양보된 분야였고, 그 결과 곡물 자급률은 20% 이하로 떨어졌으며, 농가소득은 제자리걸음, 농가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최근 여간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여 본부장이 “고통스럽지 않은 농산물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이는 농업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발언”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들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식량주권과 검역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은 이미 미국산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지난해만 해도 8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는 정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은 결코 다른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교환될 수 없는 생존 산업”이라며 “정부는 수출 성과보다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통상협상에서 농업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됐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전채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계획돼 있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어제 청문회에서 전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 능력을 충분히 확인했고, 여야 간사 간에도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약속대로 인사청문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한미통상협상에서 농업을 또다시 협상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전북 논콩 침수피해, 농업재해 복구비 지급”

민주 이원택 의원, “7월 말까지 보상·지원 이뤄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지난 6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해 전북 지역 논콩 재배지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피해가 농업재해 지원 기준에 따라 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 7월 말까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김제, 부안 등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총 1,393헥타르에 달하는 논콩 재배지가 침수되며 파종 후 미발아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난 14일까지 최종 확인됐다. 특히, 김제·부안은 정부의 전략작물 확대 정책에 따른 논콩 재배 참여 농가가 집중된 지역으로, 피해의 규모와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장 조사를 거쳐 해당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복구비는 약 54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논콩 피해는 자연재해일 뿐 아니라, 정부가 전략작물로 지정해 재배를 유도한 품목에서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복구와 지원에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재해 시 충분한 보상과 기반 정비는 농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피해 직후인 6월 22일 김제·부안 등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가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 등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피해 조사와 실질적인 복구 지원, 보령기간 연장, 신속한 배수개선 사업 등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농가가 논콩을 재배종할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기한을 7월 18일까지 연장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접수는 8월까지 진행되며, 직불금 지급은 11~12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콩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작물인 만큼, 재배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 기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피해를 계기로 김제시 죽산면, 부안군 행안면 등 피해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확대 등의 보완조치가 이뤄질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학교민원처리, 법은 시행됐는데 계획 수립도 안돼”

이병철 도의원, 5분 발언서

15일 열린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소속 이병철 의원(전주7)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학생민원 대응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병철 의원은 “학생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으며 “그간 입법과정과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으로, 제30조의10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당국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민원 대응을 전자시스템으로 대

응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 공포했고,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올 6월 21일부로 시행됐다.

이 의원은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계획수립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북교육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학교민원 대응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권 보호는 전북 교육을 호호하는 것이라는 일념으로 도교육청이 교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 강력 대처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현 감사위원장 임명, 조례 위반… 바로잡아야”

이수진 도의원, 5분 발언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조례상 부직격자가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주장하며, 김관영 도지사가 즉각 임명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되



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조례 제15조 감사대상기관을 보면 본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감사관은 바로 이 본청 소속의 자체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

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인 본청 감사관으로 근무한지 2년만에 임명된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돼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조례와 법률 해석에 기초할 때 감사위원장 임명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이대로라면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너질 수 있기에 김관영 도지사가 조례를 위반한 감사위원장 임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단풍의 도시 정읍의 정체성 공고히 해야” | 이복형 정읍시의원, 시의회 5분발언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고부, 영원, 덕천, 이평)은 15일 열린 제3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단풍의 도시 정읍’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때라며 단풍나무 식재의 확대와 그에 걸맞은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내장산 일대의 단풍나무가 고사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운을 폈다.



리고 단풍나무의 가치를 공감하는 시민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단풍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읍시 관내 주요 도로변과 공원, 하천 변, 마을 안길 등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 단풍나무를 적극 심고, 이를 테마로 하는 거리나 쉼터, 산책로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심어진 단풍나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가정법원 설치해야”

김희수 도의원,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총 7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이중 하나가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청소년 일탈 범죄, 가족 해체나 분쟁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인해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북자치도만 하더라도 연평균 1,5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어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지역간 사법격차 및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수 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 인프라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정법원을 전주에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농가소득 불안 부추기는 정책 개선을”

도의회, 나인권 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열린 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발의한 ‘농민 이름 외면하는 농업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벼재배면적 조정제와 신동진비 퇴출 계획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농가 소득 불안을 심화시키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주문은 △논에서 타작물 재배 전환이 가능하도록 농업기반 조성 선행 △쌀 수급 조절정책의 방향을 다변화하고 시장안정과 농가소득을 고려한 실질적 수급관리체계 마련 △정농가소득 위협하는 신동진 비 퇴출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은 현장을 외면한 채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주권 정부를 지임한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 개선해야”

도의회, 박용근 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는 농가의 경영비를 줄이고, 농·축협의 지속 가



난한 운영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농업 관련 주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항목은 12건에 달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조세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3년의 일몰기한을 두고 운영돼, 일몰 시점이 도래할 마다 반복되는 연장 논의는 농업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만호 기자